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한은, 2014년 경제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
- 이 슈 : (경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산업)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고령화 대비가 부족한 국내 가계자산 구조
- 세 심 록 : 두려워하지 마라
- 북 리 뷰 : Savage Continent, Europe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 동향

○ 한국은행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금년도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
한 가운데 하방리스크 가능성을 시사

- 금년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수출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세월호 소비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금년 중 3% 후반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4~15년 중 GDP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실적치 등을 반영한 결과 지난 4월 전망
에 비해 각각 0.2%p 낮은 수준임
- 그렇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소득(GDI)
증가율(4.7%)이 GDP 성장률(3.8%)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향후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
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판단

- 물가는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측면에서
의 하방압력 확대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

○ KOSPI, 2기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최고치 경신

- KOSPI는 부동산 규제완화, 배당확대 등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최고치

-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이지만, 원화강세 완화와 2
기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시도가 나타날 전망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7/4	7/18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0.1	1.8	0.7	2.7	2.5	-2.3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4	1.1	1.1	1.3	1.5	1.7		-
	실업률(%)	3.2	3.1	3.0	2.8	4.0	3.9	3.9	3.6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73.5	71.2	93		
금융 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7	2.88	2.84	2.67	2.58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70.9	1,044.6	1,025.0	1,016.8	1,017.7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52.4	1,991.2	1,994.1	1,994.4	2,006.4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7/7~7/18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_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1) - 일자리 양은 충청권, 질은 수도권

- 지방자치 20년과 지역경제의 재조명 추세 속에서, 지난 5년간 지역별 일자리의 비중과 특징이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 지난 5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청권'으로,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해석됨
 - 제주도와 호남권, 수도권도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여성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며, 다음은 '강원'임
 -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
- 고임금, 창조산업, 대기업 일자리 등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의 비중은 수도권에 가장 높았고, 지난 5년간(2007~2012년) 수도권의 비중은 더 높아졌음
 - 지난 5년간 고임금산업(금융보험, 방송통신 등 5개 산업)의 일자리 중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은 58.9%이며, 5년 전에 비해 2.0%p 증가했음
 - 창조산업(건축, 예술, ICT기기 등) 일자리도 수도권에 3분의 2 이상 집중되어 있음
 - 2012년 현재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는 수도권에 전체의 58.2%가 몰려 있으며 5년 전(56.6%)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울산이 가장 높음
-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은 '울산'이 68.2%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이 몰려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상용직의 비중은 울산(68.2%), 서울(66.5%), 충남(65.3%), 경남(64.0%) 등이 높음
- 자영업 일자리 비중은 '강원'(26.8%)이 가장 높고, '대구'(24.9%)도 높은 편임
 - 관광 관련 서비스업과 영세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14-28호 (2014. 07. 11.) 에서 발췌 요약.

-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과 지역거점대학의 육성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외자유치, 지역특화산업 및 거점대학의 육성

< 광역경제권별 일자리 증가율 >

	연평균(2007-2012) 증가율	
	사업체 (%)	종사자 (%)
전 국	2.00	3.10
수도권	2.27	3.12
충청권	2.51	4.16
호남권	1.85	3.14
대경권	1.54	2.88
동남권	1.44	2.46
강원권	1.41	3.04
제주권	2.17	3.39

<고임금산업 일자리의 지역별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07	2012	2007	2012
전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8.7	51.3	56.9	58.9
충청권	9.3	9.1	9.1	8.9
호남권	10.9	10.3	8.9	8.3
대경권	10.8	10.1	8.4	7.9
동남권	15.8	14.9	13.0	12.4
강원권	3.2	3.0	2.6	2.5
제주권	1.3	1.3	1.0	1.0

김동열 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이슈 : (산업)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2)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GDP에 비교해 본 기업R&D투자 비중은 높지만, 제조업 혁신 활동은 독일,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 투입과 선진국 추격 전략으로 제조 중심국으로 올라섰으나 아직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다. 지난 6월 대통령은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경쟁국의 제조업 재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제조 혁신을 유인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로버트 앳킨슨 등이 제안한 제조업 혁신을 유인할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세제(Tax), 교역(Trade), 기술(Technology), 인력(Talent)" 등 네 영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세제 (Tax)면에서 보면, 한국은 법인실효세율이 낮지만,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제조 경쟁 이점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OECD 상위 수준에 달하며, 최근들어 고기술 제조업종의 법인세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이 기업 R&D에 크게 기여하는 R&D 조세 지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첨단 제조 및 설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독일은 이미 2007년에 법인세율을 39%에서 29%대로 인하했다.

둘째, 교역 (Trade)면에서 보면, 한국은 규제 수준이 높아 시장 혁신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OECD는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를 통해 시장의 혁신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3년 조사에서 비교국가중 혁신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교역 환경지수(Enabling Trade Index)에서도 한국은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접근성이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일본은 대외 진출 및 대내 직접 투자의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19%인 무역의 FTA화율을 2018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은 범부처 차원의 통상 강화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설치하였다.

셋째, 기술 (Technology)면에서 보면, 한국은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나,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금액 / 기술수입금액)은 여전히 1 이하에 머물러 핵심기술의 해외 의

2)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14-25호 (2014. 07. 16) 에서 발췌 요약.

준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기술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책도 미흡하다. 미국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조업 혁신가속화를 위한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본은 범부처 참여의 횡단형 프로그램을 통해 R&D력을 강화하고, 이를 운영할 종합과학기술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독일은 다양한 산학연 R&D 협력프로그램, 중소기업 특화 R&D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넷째, 인력 (Talent)면에서 보면, 한국은 숙련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인재 유출이 많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인력부족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 규모(종업원수 기준)가 적을수록 부족인원이 심각하다. 8대 주력제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 2.6%로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일 수록 부족 상황이 심각해, 100명 미만 기업의 부족인원이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현장 학습형 직업교육 체계의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숙련 인력의 이민 유입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첨단제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펀드 조성 및 제조혁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4T로 본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 혁신 정책 동향 >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세제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제조업 25%) 하향 -첨단제조부문의 세금 공제 -U-턴 기업의 세제 지원	-법인실효세율 인하 추진 -사업재편 촉진세제 도입 -첨단설비 도입 등에 대한 즉시 상각, 세액 공제 등	-법인세율 29%대 인하(07년) -고용보험요율 3.3% 하향 -중소기업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도입
교역	-범부처 통상 강화책을 수립하는 ITEC 설립	-2018년 FTA화율 70% 달성 (현재 19%)	-중견기업의 무역 활동 지원 및 자금지원 시책개선
기술	-민관학 참여의 첨단제조파트너십위원회 설치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구축 -제조 강화 R&D 증액	-종합과학기술회의 기능강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과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프로그램” 창설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2020 추진 -다양한 산학연 R&D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R&D 특화 프로그램
인력	-첨단제조업종, 고성장 산업의 인재훈련펀드 조성 -제조혁신기관 건립	-노동 이동 촉진할 조성금 확충 -여성 청년층, 전문인력 취업 확대	-현장학습형 직업교육 실시 -고숙련 인력의 이민 유입 장려

우리나라는 세금, 기술, 교역 여건, 기술 개발, 인력 확보 등 4T 요인 면에서 제조업 혁신을 유인하고, 촉진할 기반 구축이 미흡하다. 정책 실행 체제로서 미래 제조업을 강화육성할 종합화된 체계적인 비전(Big Picture)과 실행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 세제면에서는 제조업 혁신 목적의 연구개발, 인력육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수 비중과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향에 대응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 운영이 요청된다.

둘째, 교역면에서는 시장 진입과 무역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제거 및 규제 강도 약화와 같은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혁신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기술면에서는 차세대 '한국형 제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과제를 개발하고, 기술 수요 해소와 기술 이전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협력 방안이 요청된다.

넷째, 인력면에서는 차세대 제조업 모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혁신 실행 체제면에서 차세대 제조업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정부(범부처), 재계, 학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R&D를 포함한 혁신 기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

□ 테마 : 고령화 대비가 부족한 국내 가계자산 구조³⁾

○ 요약

국내 가계의 자산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GDP의 7.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노후생활에 적합한 자산 구조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 대비라는 관점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내 가계자산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매우 낮다.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3%로서 일본 60.2%, 미국 70.4%, 유로존 58.3% 등과 비교된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그 비중이 뚜렷이 낮아져, 노후생활의 유동성 문제가 예견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치가 급락할 경우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소비생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둘째, 금융자산 중에서도 저수익성 안전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현금과 예금', '보험 및 연금' 등 안전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72.4%이다. 실질실효금리 제로 (또는 마이너스)의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들 자산의 수익률이 극히 낮아 노후대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보험 및 연금'에서 사적연금 비중이 매우 낮다. 가계금융자산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서 OECD 평균 16.3%와는 뚜렷히 비교되고 있다. 비교적 건실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평균 보다 20%p 이상 낮아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예견된다.

넷째, 금융투자 자산에서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상품의 비중이 낮다. 현재 금융투자자산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미국 22.8%, 일본 32.2%, 유로존 25.2% 등에 비해 낮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적합한 월지급식펀드 비중이 매우 미흡하다. 금융투자자산 가운데 직접투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자칫 노후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노후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개인금융자산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가계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도 고령화에 따른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노령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연금, 펀드 등의 고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되, 이들 상품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가계들도 고령화 대비하여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사적연금, 펀드 등의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3)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가계자산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14-24호 (2014. 06. 18)을 바탕으로 재구성.

□ 가계자산의 현황

○ (구조) 가계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실물자산)으로 구분되고 있음

- 금융자산은 금융상품과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

- 금융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투자·보험 상품을 의미
- 기타 금융상품으로는 전월세보증금과 권리금까지도 포함되며 통계청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를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음

-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분

- 부동산은 보통 주택, 토지, 건물 및 상가 등으로 구분
- 기타 실물자산은 귀금속, 그림 등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영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 건설 및 농업용장비, 동물 및 식물까지도 포함

< 가계자산의 구조 >

구 분		비 고
금융자산	금융상품	○ 현금과 예금 : 은행 정기예금 등 ○ 투자상품 : 주식, 채권, 펀드 등 ○ 보험 및 연금 : 생명보험, 사적연금 등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금융자산	○ 전월세보증금 ○ 권리금 등
비금융자산 (실물자산)	부동산	○ 주택 ○ 토지 ○ 건물, 상가 등
	기타 실물자산	○ 설비 및 재고자산 ○ 동식물 등 ○ 지적재산생산물 ○ 미술품, 귀금속 등

○ (현황) 2012년말 국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총자산은 7,210.6조원을 기록하고, 이중 가계금융자산은 2,474.1조원을 기록함

-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2014.5)에 의하면 2012년말 국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자산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7,210.6조원(GDP의 7.7배) 기록
- 비금융자산은 전년대비 3.0% 증가하면서 4,736.5조원 기록하고 금융자산은 7.3% 증가한 2,474.1조원을 기록⁴⁾

4)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2014.5)에 의하면 국내 비금융자산 중에서도 주택, 건물, 상가 등 생산적 건설자산의 비중은 29.0%에 불과하고 비생산적인 토지 비중이 무려 68.1%로 조사.

- 한편 가계금융자산은 2000년대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말 현재 2,624.2조원을 기록
- 가계금융자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증가세
- 2013년 말 현재 '현금과 예금' 1,200.9조원(약 45%), '보험 및 연금'이 763.9조원(약 29%),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이 659.3조원(약 25%)

< 국내 가계자산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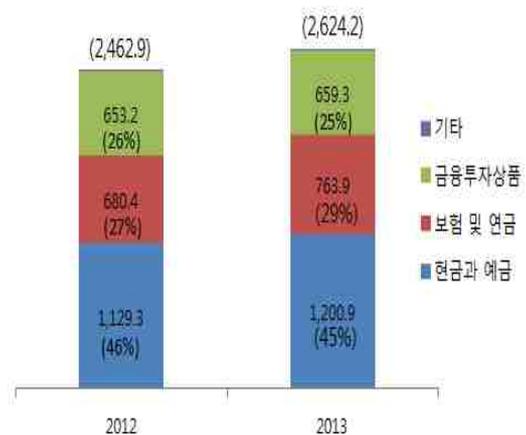
(단위 : 조원)

	'11년 말	'12년 말
비금융자산(A)	4,596.6	4,736.5 (3.0%)
금융자산(B)	2,305.6	2,474.1 (7.3%)
총자산(A+B)	6,902.2	7,210.6 (4.5%)

자료 :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2014.5).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2012년까지만 분석.

< 가계금융자산 구성 >

(단위: 조원)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주 : 1) 국민대차대조표와 자금순환에서의 금융자산 규모가 SNA 개편으로 소폭 차이.
 2) ()안은 비중.

○ 고령화되면서 노후생활에 적합한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직접투자 보다는 펀드 등의 간접투자수요가 증대함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기(소득 > 소비) 동안 저축을 통하여 자산을 증대시키며, 은퇴에 가까워지면서는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 수요를 증가⁵⁾
- 사회진입기(20~30대)는 결혼과 주택마련 등을 위하여 저축을 시작
- 자산 축적기(30~40대)에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실물자산이 증가
- 은퇴준비기(40~50대)에는 주택관련 대출을 어느 정도 청산한 이후부터는 은퇴 후의 소비를 위하여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

5) 경제학의 생애주기소비이론에 근거하면 개인들은 경제활동기에 저축된 자산을 가지고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영위함.

- 금융자산 수요는 은퇴 후 오랜 기간 일정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채권, 펀드, 연금 등 장기 안전 금융상품이 선호됨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안정성이 높고 정기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과 운용이 중요하므로 스스로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관리 하기 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간접운용을 선호하게 됨

○ 고령화 시대 대비라는 관점에서 국내 가계자산의 특징을 통계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거시적 총량 관점과 미시적 가계 관점에서 파악 가능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사용
- 한국은행 자금순환은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자금흐름)가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서 이에는 자산과 부채 등 잔액(stock) 개념도 포함
- 2010년부터 통계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계의 금융과 복지와 관련한 실사조사를 실시
- 2014년 5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비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짐

< 국내 가계자산 통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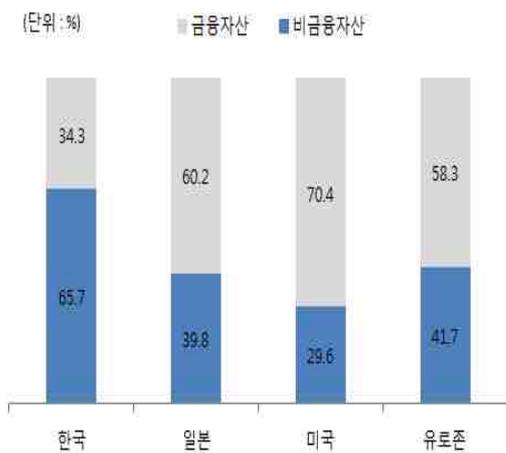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청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조사 방법	- 국민경제 금융거래를 통해 파악	- 20,000 가구 설문조사	-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 개발
수치 형태	- 국민경제 가계부문 금융 자산 총액	- 조사대상 가계의 평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국민경제 가계부문 금융 및 실물자산 총액
가계 대상	- 가계(자영업자포함) 및 비영리단체	- 순수 가계	- 가계(자영업자포함) 및 비영리단체
통계 특징	- 1993년부터 일관된 통계 - 분류별 파악 불가 - 실물자산 통계 없음 - 국제비교 가능	- 2010년 이후부터 가능 - 분류별 파악 가능 - 실물자산 조사 포함 - 국제비교 불가능	- 2012년 통계 가능 - 분류별 파악 불가 - 실물자산 조사 포함 - 국제비교 일부 가능
조사 시기	- 매분기 및 연간 조사	- 연초(3.31) 조사	- 2014년 5월

□ 국내 가계자산의 특징

○ (낮은 금융자산 비중)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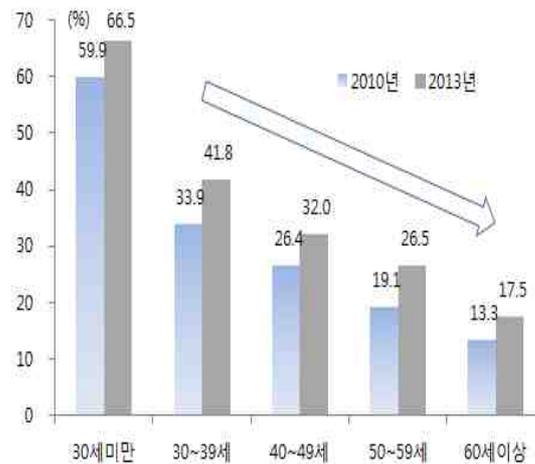
- 국내 가계(비영리법인포함)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음⁶⁾
 - 국민대차대조표(2014.5)에 의하면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3%로 조사
 - 일본의 경우 60.2%, 미국의 경우 70.4%, 유로존의 경우 58.3%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수준⁷⁾
- 국내 가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별첨> 참조)
 - 통계청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년~2103년 실물자산 가치하락,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총자산대비 실물자산 비중이 전 연령별로 증가
 - 하지만 고연령층 가계일수록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낮아지면서 50세 이상의 경우 30% 이하에 머물고 있음

<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비 >



자료 :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2014.5).

< 연령별 가계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가공.

주 : 2010년 2.28일 기준, 2013년 3.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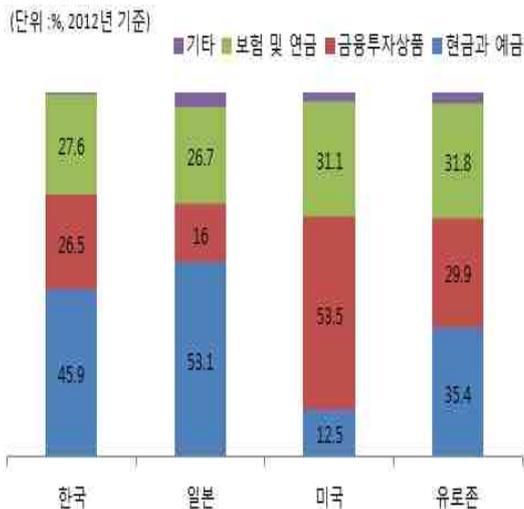
6) 국제비교를 위해 구매력평가환율(2012년 PPP환율(OECD DB) 달러당 847.93원)로 평가.

7)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이른 1990년에만 해도 실물자산의 비중이 63%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버블 붕괴로 2001년 2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40% 수준으로 회복.

○ (높은 저수익성 금융자산 비중) 금융자산 중에서도 저수익성 안전 금융자산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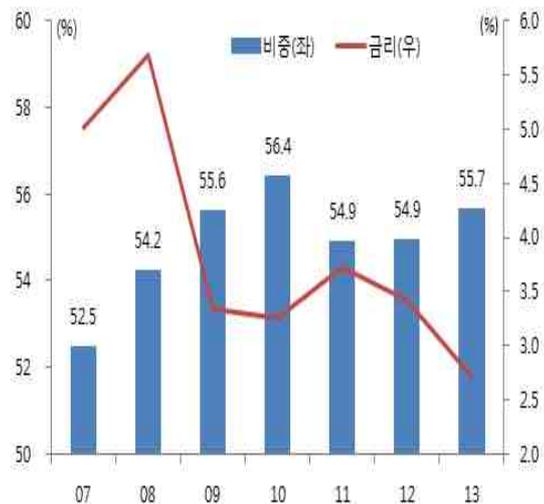
- 일본을 제외하고 원금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현금과 예금', '보험 및 연금' 등 안전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72.4%로 매우 높음
 - 일본의 경우 '현금과 예금'(주로 은행 및 우체국 예금)과 '보험 및 연금' 비중이 도합 79.8%를 차지
 - 미국은 '현금과 예금'은 12.5%, '보험 및 연금'이 31.1%,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53.5%를, 유로존 전체의 경우 '현금과 예금'과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도합 67.2% 차지하고, 금융투자비중이 29.9%를 차지
- 초저금리 하에서 '현금과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 및 연금' 등이 수익률 저하 문제로 자산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예금은행 정기예금 중 단기(6개월~1년)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56.4%까지 올라간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55.7%의 높은 비중을 차지
 - 단기 정기예금금리는 2%대 중반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질실효금리 제로(또는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
 - 보험의 경우 이자가 없는 보장성 보험 비중이 크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경우 현재 저수익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2014.5)
 유로존은 ECB(한국금융투자협회 재인용).
 주 : 2012년말 기준, 유로존은 12.3Q.

< 예금은행 단기 정기예금 비중과 금리 >



자료 : 한국은행.
 주 : 6개월-1년 정기예금.

○ (낮은 사적연금 비중) 가계금융자산에서 '보험 및 연금' 비중은 낮지 않으나 주로 생명보험에 기인하며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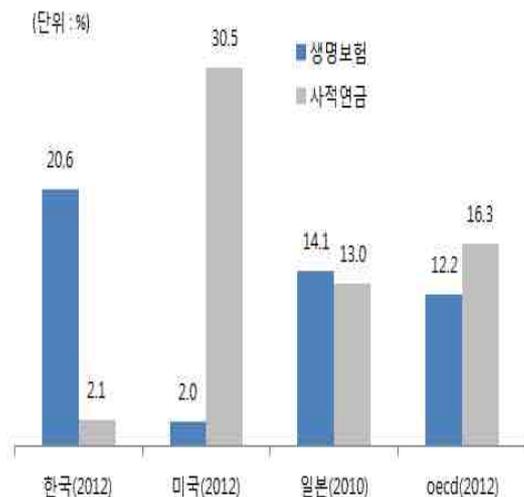
- 국내 가계금융자산에서 생명연금의 비중은 높은 반면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음

- 국내 개인연금상품으로는 퇴직 후 안정적 삶을 위한 기업지원의 퇴직연금과 각 개인의 은퇴 후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연금으로 구분
- 2012년 현재 개인 금융자산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서 미국, 독일 등뿐만 아니라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6.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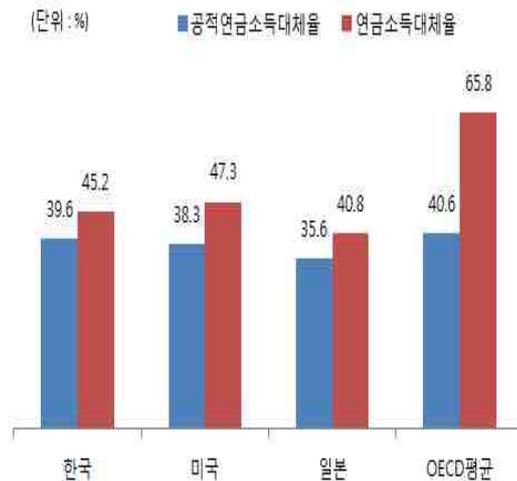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적연금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전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예견됨⁸⁾

-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39.6%로서 OECD 평균 40.6%와 비슷한 수준
-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일본보다는 높으나 OECD 평균 65.8%보다 20%p 낮음

<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대비 생명보험과 사적연금 비중 >



< 주요국 연금의 소득대체율 >



자료 : OECD Factbook 2014, Pensions at a Glance 2013.

주 : 1)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공적제도에 의한 대체율이며, 연금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순연금대체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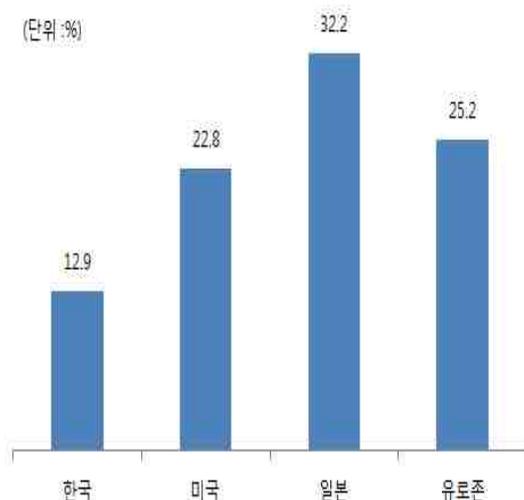
2) 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⁸⁾ 하지만 OECD 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국내 공적연금 수준은 GDP대비 1.7%로 OECD 평균인 7.0%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낮은 간접금융투자 비중) 금융투자 자산에서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상품의 비중은 높고,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상품의 비중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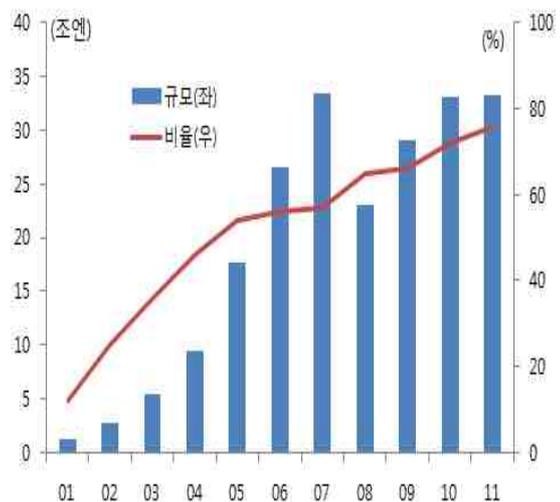
- 국내 금융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보다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 및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식 부족으로 직접 자신의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자산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려는 경향이 있음
 - 국내 금융투자자산 중 간접투자 상품의 비중은 12.9%로 미국 22.8%, 일본 32.2%, 유로존 25.2% 등에 비해 매우 낮음
-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초저금리·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월지급식펀드가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
 - 일본의 월지급식 펀드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2011년말 일본 공모주 가형주식펀드(ETF제외) 순자산액의 76%를 차지(월지급식펀드의 투자 대상은 시대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군에 따라 변화)
 - 2012년말 현재 국내 월지급식 펀드의 수와 운용자산총액은 89개와 1.6조원 수준으로 전체 펀드수와 운용자산총액의 0.8%, 0.5% 수준 불과

< 금융투자 자산중 간접투자 비중 >



자료 : 각국 중앙은행, 통계청, 한국금융투자협회 재인용.
주 : 2012년 3분기 기준.

< 일본 월지급식 펀드 순자산액 >



자료 : 일본 투자신탁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자료 재인용.

□ 시사점

○ 국내 가계자산의 현재 구조로서는 고령화 준비가 크게 미흡함

- 총자산 중 높은 실물자산 비중은 고령화 가계의 유동성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가치가 급락할 경우 고령자의 소비생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임
 - 연령별로 고연령층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되는 구조로서, 특히 고연령자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
 - 비금융자산 중에서도 토지 등 비생산적인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향후 유동성문제와 수익성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⁹⁾
- 저금리시대에 예금 및 보험 위주의 저수익성 금융자산으로서는 금융자산 증식이 어려우며, 이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어렵게 함
 - 오랫동안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초저금리(실질실효금리 제로 또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은행예금으로 집중
 - 연령별로 최근 저연령층의 전월세보증금 증가가 저연령층의 금융저축 여력 약화시켜 고령화를 위한 자산축적에 어려움을 시사
- 금융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험 및 연금'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지만 사적연금 비중이 낮아 고령화 생활에 적합하지 않음
 - '보험과 연금' 비중 자체는 낮지 않지만 이중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비중은 매우 낮아 향후 노후보장소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보장성보험의 경우 실현되지 않으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가계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성격도 지님
- '금융투자상품' 비중 자체로도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지 않지만 직접투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는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경우 노후생활의 안정성이 위협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자산 중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낮아 시장위험에 직면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움
 - 국내 펀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아니며 대부분 단기 수익률을 목표로 한 형태

⁹⁾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위주로 하는 건물자산 등 생산자산의 비중이 31.6%, 반면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농경지 등 비생산자산의 비중은 68.4% 차지.

- 각 경제주체들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가계자산 정책과 관리가 필요함
- (정부)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이를 금융자산화하는 정책과 금융자산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
 - 정부는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한편 가계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특히 정부(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도 주택 등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려
 - 저연령층의 저축 증대를 위한 전월세부담을 완화하여 저축여력 증대 방안
 -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체계를 강화
 - (금융기관) 고령화에 따른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
 - 노령자들을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월지급식펀드 등의 고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되 이들 상품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
 - 노후 준비를 고려하고 있는 40대 미만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요구 증가에 부응하는 자본시장 관련 신상품 개발
 - 각종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자산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기능 강화
 - (가계) 고령화 대비하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펀드, 사적연금 등 노후생활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도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관리 장치가 보완된 간접투자가 바람직함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세심록(洗心錄)

○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추기경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3월초 서임 감사 미사에서 “공존과 함께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사회의 통합을 촉구했다. 지구 반대편 로마에서도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체스코 교황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자신을 낮추고 교회를 나가서 노숙자를 만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과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에도 버스를 타고 다녔으며, 대주교 관저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등 청빈한 삶을 실천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행동과 더불어 말씀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교황의 설교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연설 장면들도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작년 성탄절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였다. 하느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빛 속을 걷게 되므로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취지였다.

요즘과 같이 국내외 경기가 불안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굳이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두려워하지 마라’는 교황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속세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빛이 보이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비하고 있다면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 미국의 발명가이자 정치가

□ 북리뷰 : **Savage Continent, Europe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¹⁰⁾**

1970년생인 Keith Lowe는 영국인으로 영어권에서는 2차 세계대전사에 정통한 저술가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 「Inferno, the Devastation of Hamburg, 1943」을 출판함으로써 세상에 그 이름을 알렸다.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한 사실(事實)에 근거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유럽은 20세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세시대의 생활로 회귀
 -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산업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공간의 상당부분도 파괴됨
 -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3천 5백만에서 4천만 명

- 독일과 독일군에 대해 해방된 지역 시민들의 복수 진행
 - 1천 1백만 명의 독일군 포로들이 있었고 소련군 관리하의 315만 명 중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수용소 수감 중 사망
 - 독일계시민들이 많았던 폴란드, 체코 등에서 지역주민들이 독일군이 전쟁 중에 이들에 했던 가혹행위를 그대로 돌려줌

- 독일계 시민들의 독일로의 추방과 유대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청소 시작
 - 각국에서 소수민족인 유대인의 재산을 임의로 몰수함으로써 수용소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고 이들이 팔레스타인으로 탈출
 - 1945년에서 1949년까지 각국은 살고 있던 독일계 시민들을 독일로 추방했는데 그 숫자가 1천 173만 명으로 추산
 - 동시에 각국은 국경 안에 살고 있던 다른 소수민족들을 추방하는 작업 착수

-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세력화가 내전으로 연결되었고 그리스에서 절정
 - 각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했고 소련점령하의 동구권은 부정선거와 물리적 위협의 도움으로 이들의 집권이 실현되었지만 서구는 실패
 - 좌파가 집권했던 그리스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우파가 내전을 통해 1949년 권력을 되찾았으며 1948년부터 시작된 마셜플랜과 더불어 세계는 냉전에 돌입

- 유럽의 경험은 남북통일의 성공여부가 이후 필연적으로 야기될 혼란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가리킴

¹⁰⁾ Lowe, Keith, Savage Continent, Europe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NY, Picador, 2012.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